

경제난국은 재벌개혁과 공정한 고용분담으로 풀어야 한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서민들은 더 이상 줄라멜 허리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IMF 긴급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러 가지 진단과 대책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피상적인 대책들이 거론되면서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경제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는 굴욕상황이 초래된 근본 원인이 간과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200억불의 외부 지원금으로 간단히 개조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민시대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서 부패척결과 재벌경제의 개혁, 정경유착의 근절과 사회복지의 확충을 꼽아왔다. 그러나 개혁의 의지를 조기에 상실한 문민정부의 독선적 통치와 그 뿌리인 야합정치의 관행은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및 개혁의 저력을 근본부터 약화시켜 경제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 시급한 금융과 재벌경제의 개혁을 미루게 된 것은 정부의 무능과 야합정치에 기인한다. 경제를 살리는 기초가 되어야 할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노동법개혁과 동으로 귀결되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사회를 선도해야 할 언론은 개혁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부패와 위압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공직사회 역시 종합적 부패방지제도의 부재로 인해 현재 총체적 말기현상을 노정시키고 있다. 한보철강의 부도에 이은 현대의 철강업 진출, 기아자동차 사태와 병행된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에서 드러나듯 재벌의 비정상적 투자는 조정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정상적 투자에 대해 3당 후보가 모두 찬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할 지도력을 찾을 길이 없다. 이런 와중에서도 계속된 구 신한국당의 당직자 지역감정 발언,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줄서기 행태, 이미 심각한 고용불안 속에서도 일부 기업의 불법대량 해고를 방치하는 정부당국의 모습 등은 국정의 총체적 표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경제위기를 경제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지켜보고 반성하면서 우리는 정부의 관치·특혜 금융과 재벌의 과잉중복 투자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해악이라는 국내외의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경제개혁의 근본적 접근을 수반하지 않는 '대중요법'식의 단기적인 처방은 위기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데 그칠 뿐이며 장기적인 또다른 위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경제위기를 경제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출발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정경유착, 관치금융,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경제의 국제적인 흐름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분별한 사업확장 내지 내부적인 과잉투자, 대기업의 부실을 정책금융으로 보전하는 안이한 정책 등을 동시에 지양하는 총체적 경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우리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와 각 정당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대책, 재벌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진실된 자기반성을 통해 지역감정 조장, 세물어, 흑색선전, 권력 나눠먹기, 명분없는 이합집산 등 야합정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용안정, 금융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인권신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국회에서의 졸속처리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작년에 날치기 통과되었던 안기부법을 재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하여 국민적 의견수렴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며, 이는 정치권과 재벌의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뢰회복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새로운 갈등을 심화·재생산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제 구제금융에 따른 외부의 지시가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사·정 3자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함께 하는 “경제력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진지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고용불안 문제에 대하여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 일차적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벌의 일대변혁이 필요하다. 재벌은 성실한 자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장 큰 특혜를 누려온 최대의 경제적 수혜자가 앞장서서 자신의 병리를 치료하고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사회계층도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의 위기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일치된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기업들의 총체적 자기반성과 경영합리화의 노력은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재벌들은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금융실명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책임전가식의 자세를 버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시급하게 금융개혁을 실천하여야 한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관치금융으로부터 독립되어 시장경쟁의 원리에 근거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 또한 관치금융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악용하여 당장의 금융위기극복과 직접 관련없는 금융감독권의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려는 기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허황된 세계화의 환상에서 벗어나 소비계층의 망국적 소비를 규제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와 과다수입, 조기유학붐과 사치행각은 분명 심각한 사태로서, 이러한 관행에는 쐼지를 박아야 한다. 고급자동차와 술, 보석과 모피를 비롯한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를 강력히 억제하고 망국적인 과도한 혼수를 절제하여 정부와 국민이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헤쳐나가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소비계층의 잘못된 소비문화는 추방할 수 없다.

위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로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난국을 근본적으로 헤쳐나가는데 참여할 것이다. 정부의 미온적 대처나 재벌의 구태, 언론의 왜곡 보도, 소비계층의 과소비풍조 등에 대해 국민대중이 한 마음으로 치밀한 감시자와 고발자가 되어 잘못된 행태를 고쳐나감으로써, 금권과 정권으로 하여금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혁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7년 11월 24일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건강사회보건의료대표자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운동탄압대책위, 노동연구단체협의회 (11개단체)